

출산·고령화에 '연금 흔들'... 해외는 보험료·수급연령 손질

연금과 생존전략

③ 주요국 개혁 흐름

1988년 도입, 日·독일 참고 설계 기대수명 70세, 출생률 1.55명

스웨덴, 보험료 18%·보증연금 보완
독일,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상향
일본, 보험료 18.3%·자동조정 도입



지난해 3월 '제3차 연금개혁' 통과 이후 여·야 소속 3040세대 의원들이 연금개혁 과정에서의 청년 세대의 이익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적연금제도인 독일의 '노동자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00년 째가 되는 해였다.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이 주요국과 비교해 늦었던 만큼, 국민연금은 해외의 선진적인 운영 사례를 참조해 제도를 설계했다. 도입 과정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규모 이상 사업장부터 제도 가입을 의무화했고, 급여액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납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비례한 소득비례급여 형태를 채택했다.

한계도 분명했다. 1988년에는 그 해 태어난 출생자의 기대수명이 70.7세에 불과했고, 2차 베이비부머(1964년~1974년생)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사회의 부양 여력도 낮았다. 합계출생률은 산

아제한정책에도 1인당 1.55명 수준을 기록해 2025년의 0.80명보다 약 2배 높았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로, 소득대체율은 70%로 설정됐다. 지난해 제3차 연금개혁 이후 재산정된 보험료율 13%(2033년 기준)와 소득대체율 42%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다.

거듭된 연금개혁에도 국민연금의 전망은 밝지 않다. 국내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인구 재생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드는 데도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난다. 연기금이 운용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1458조원의 적립액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도 이르면 오는 2070년 이전에 전부 소진될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온다.

◆ 연금개혁, 해외 성공 사례는?
인구구조 변화를 이유로 '연금개혁' 과제를 마주한 나라는 한국 뿐만이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은 이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현재도 연금개혁의 과정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조해 시행 착오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스웨덴은 1960년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초연금제도와 부분적립 형태의 비례연금제도를 병행해 운영했다. 그러나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사항과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스웨덴은 고용주가 근로자 소득의 13%만큼 부과했던 연금보험료를 18%까지 높이고,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연금 지급액도 기여액에 따라 지급액을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2년 자영업자·주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조기노령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금 급여 수준을 확대했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보장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연금개혁의 부담을 늘렸고, 독일 통일(1990년) 이후 서·동독 간의 사회보장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1992년 연금개혁의 배경이 됐다.

독일은 1992년 연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총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조정했으며,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지급제도를 도입했다. 단, 출생 및 육아를 보조하기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와 '양육 크레딧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공적연금의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연금개혁으로 기존 13.6% 수준이었던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돼 2017년 18.3%까지 올랐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 연금개혁, 사회적 이해 필요

연금개혁에 실패한 사례도 다수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특정 세대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연금개혁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2년동안 일시중단했다. 2023년 9월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뒤 2년 2개월 만의 중단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중단으로 2년 동안 22억 유로(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칠레는 지난 1981년 세계 최초로 공적 연금을 폐지하고 민간운용사 중심의 적립식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면 속에 가입률과 수익률이 모두 저조했고, 수급자 간의 수급액 차이도 커졌다. 노인 빈곤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차 연금개혁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됐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1분기 불장에 국민연금 80조 벌었다

5% 이상 보유종목 평가액 323조대
삼성·SK하이닉스 비중 62.7%

올해 1분기 국내 증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도 약 80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를 공시한 상장사(291곳)의 평가

액은 323조7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액 급등 중심에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7.75%로 동일하지만, 평가액은 지난해 말 54조9906억원에서 지난 7일 90조1223억원으로 63.8% 급증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지분율도 7.35%에서 7.50%로 늘었으며, 평가액도 34조8135억

원에서 48조9850억원으로 40.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의 전체 주식 평가액 증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2.7%에 달한다.

올해 1분기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으로 신규 편입된 종목은 22개이며, 5% 미만으로 하락한 종목은 15개로 집계됐다. /신혜은 기자 godhe@



홍라희, 삼성전자 3조800억 지분 매각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12조원대 상속세 납부 마무리 수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원대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0.25%)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는 약 3조800억원이다. 이번 주식 매각으로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

은 1.49%에서 1.24%로 줄어든다. 홍 명예관장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6차례에 걸쳐 분납 중인 12조원대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앞두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5년에 걸쳐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왔고, 4월이 마지막 납기다. /양성운 기자 ysw@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이 나면 일단 대피입니다

- 비상통계고 트렁크열고
- 도로 밖 우선대피
- 사고신고 1588-2504

ex 한국도로공사